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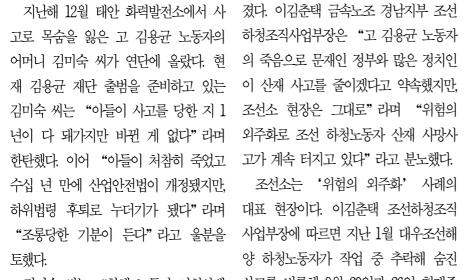
■발행일: 2019년 10월 28일(월) ■발행인: 김호규 ■발행처: 노조선전홍보실 ■스마트폰 m. ilabor.org / ■전화: 02-2670-9507

"투쟁하지 않으면 노동자 안전도 삶도

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열어 … '노동안전 정책 후퇴' 문재인 정부 규탄

민주노총이 10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'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 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결의대회'를 열었다.

조합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 동안전 정책 후퇴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, 위험의 외주 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 법 제정을 촉구했다.



김미숙 씨는 "한해 노동자 이천사백 여 명이 산재 사고로 죽고 있지만, 기업 은 솜방망이 처벌 뿐"이라며 "특히 하 청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도 원청 사용 자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"라 고 지적했다. 김 씨는 "노동자들이 직 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"라며 "민주노 대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가 거대한 쇳덩 총 투쟁과 노동자 힘으로 중대재해기업 이에 깔려 목숨을 잃은 사고 경과를 전 게 하자"라고 목소리를 높였다.



'위험의 외주화 금지' 요구가 이어

지난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 졌다.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

조선소는 '위험의 외주화' 사례의 사업부장에 따르면 지난 1월 대우조선해 양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를 비롯해 9월 20일과 26일 현대중 공업과 대우조선에서 중대 재해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올해도 조선소 하 청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

이김춘택 부장은 "지난 9월 울산 현 런 위험한 일을 시킬 수 있나 생각했 을 계속했다.

다"라며 "결국 조선소에 만연 한 다단계 하청이 노동자를 죽 음으로 내몰고 있다"라고 목소 리를 높였다. 이김 부장은 "하 청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 면 하청노동자는 계속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"라며 '조선 업 다단계 하청 금지'법 제도 제정을 촉구했다.

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"10월 22일 밀양역에서 발생한 철 도노동자 사망사고를 보며 투쟁이 없으 면 안전도 삶도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깨달았다"라며 "함께 싸워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"라고 강조했다.

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▲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▲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개정 ▲중대재해 근절대 책 마련 ▲작업중지명령제도 개정 등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마 무리했다.

결의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앞까지 행 진에 나선 조합원들은 정부서울청사 정 문 앞에 멈춰 섰다. 산업안전보건법 시 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 을 담은 '진짜 김용균법 개정 요구 엽 서'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하려 했다.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의 실랑이가 벌어져 조합원들은 결국 정부서울청사 처벌법 제정하고 기업이 제대로 책임지 해 듣고 어떻게 안전조치 하나 없이 그 당벼락을 향해 엽서를 날린 다음, 행진